

PR 전문가들의 국가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주관성 연구*

김일철** · 오세정***

- | |
|---|
| <p>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II. 이론적 논의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함의</p> |
| <p>주제어: 한일 관계, 일한 관계, 국가 관계, 국제 PR, Q 방법론</p> |

| 국문초록 |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은 문화적 교류나 경제적 거래 등의 이점이 있으나, 동시에 국경 분쟁이나 어업권 침해 혹은 공해 문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나 산업적 마찰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도 역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왜 불편하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해소 내지는 개선시켜나가기 위한 실증적 방법 모색을 위한 전략수립을 기초 자료를 구축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Q 방법론을 적용, 한국인과 일본인 PR 전문가들에게 동일한 Q 표본을 사용하여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을 발견하였다. 먼저 한국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은 '지배논리형', '환경수용형', '교류의존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일한 관계에 대한 인식은 '여론의존형', '시대상황형', '여건중시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에 따른 인식 유형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국제관계연구』 제21권 제2호(2016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16.12.21.2.171>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600630001). 본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신 한국PR기업협회(KPRCA)와 일본PR협회(JPRA)에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제기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는 문화적·인적·경제적 교류 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나 동시에 국경 분쟁이나 어업권 침해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나 여러 산업적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국경이 인접한 나라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 국경이 인접한 국가 간에도 혈통과 언어, 종교와 국익 등의 차이로 이면에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리적·지정학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 혹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불편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중국의 문물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달된 시기로부터 보면 공식적으로 두 나라는 1,5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같이해 오고 있다. 그 사이 크고 작은 왜구의 침입, 세종의 대마도 정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비롯해서 일본의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의 앙금은 도처에 역사의 흔적으로 남았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 독도영유권, 그리고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은 점점 더 양국의 갈등 관계를 심화시키는 듯 보인다.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각국의 보수화를 촉발, 이웃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고 선불리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해소 내지는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각종 학술단체나 비정부 혹은 비영리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돼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학술 관련 단체의 경우 우리나라에 설립된 한일 관련 학술단체들을 찾아보면, 한국일본학회, 한일사학회,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경상학회, 한국일본근대학회, 한국일본사상학회, 한국일본문화학회 등 수없이 많다. 이 밖에 각종 포럼이나 재단,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족히 백여 개는 훌쩍 넘는다. 이들의 설립 취지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양국 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관계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양국 관계개선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질 않는 걸까? 두 가지 가정

이 가능하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와 논의가 각자의 역사적 기록과 경험적 사실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자국적 혹은 자국민적으로 상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설정하고 상대방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데 비해, 저들은 한일 합방을 통한 시혜자임을 자처하지만 우리는 수혜자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한 상호 이해를 통한 관계개선의 접근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연구가 특정 분야 전문가의 관점 내지는 이들을 통한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의식 조사에 머무른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역사나 외교 혹은 행정이나 문화와 같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전문가의 관점은 출발에서부터 편향될 수 있을 뿐더러 그로부터 개발된 설문지에 의한 표본 추출의 결과는 피상적인 여론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따라서 정치, 경제, 역사, 외교 등 가외 변수를 최대한 제한하면서 관계 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R 혹은 공중 관계는 조직과 관련된 공중들 사이의 우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국가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이 조직인 동시에 공중이 되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중립적이며 균형적 시각에서의 국가 간 관계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 그 자체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 틀인 스키마타(schemata)를 확인해 보고, 이를 통해 국가별 인식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의 관계개선에 필요한 기본 이해의 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한일 관계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 모두 80% 이상이 동의한 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상대국이 하는 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인 77%, 일본인 57%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는 한일 관계개선이 현실적으로

1) 진창수,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 『JPI 정책포럼』 155권 (제주평화연구원, 2014), p. 20.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준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양국의 관계 악화가 동북아 질서나 경제 관계, 민간교류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서로 비판하고 책임을 떠넘길 뿐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또한 일본과 한국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시혜자와 수혜자가 아닌 가해자와 수혜자, 시혜자와 피해자라는 왜곡된 관계 설정이 지속되는 한, 역사 연구를 통한 양국 간 관계개선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왜 불편하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편한 관계를 해소 내지는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실증적 방법이나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해 보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일 관계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역사적 사실 해석, 언론 역할이나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정치지도자의 외교 방식이나 메시지 전달 방식, 시민단체의 역할, 또는 한일 관계의 주체로서 분야별 학문적 전문가 혹은 일반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통계적 결과를 설명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²⁾ 물론 PR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PR 인식³⁾이나 386세대의 정치에 대한 태도,⁴⁾ 정치부 기자들의 정치인 인식,⁵⁾ 대통령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공중의 정치 인식 유형 연구⁶⁾ 등 인간의

2) 광진오, “독도와 한일관계: 일본의 독도인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4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0), pp. 47-64; 김상준, “한일관계의 안정과 지속: 정치지도자의 메시지 전달과 정향을 중심으로,” 『日本研究論叢』 제41호 (현대일본학회, 2015), pp. 107-132; 김영희, “한일관계에서 언론의 역할,” 『관훈저널』 통권 제135호 (관훈클럽, 2015 여름), pp. 107-110; 김호섭,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 역할,” 『일본연구논총』 제29호 (현대일본학회, 2009), pp. 59-83; 박진희, “한일관계, 역사를 알면 미래로 나갈 수 있을까? —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비평사, 2014); 조세영,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역사와 현실』 통권 제96호 (한국역사연구회, 2015), pp.393-411; 신경애, “한국 대학생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수업에 대한 니즈,” 『일본문화연구』 제55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5), pp. 163-185; 이동준, “한일관계 보도 이대로 좋은가,” 『관훈저널』 통권 제138호 (관훈클럽, 2016a), pp. 39-45; 이성환,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과 한일관계,” 『일본문화연구』 제53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5), pp. 273-294; 정미애, “한일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뉴거버넌스,” 『이데연구』 제18권 제2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1), pp. 17-41; 정재정, “한일관계의 위기와 극복을 향한 오디세이: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Vol. 5 (동북아역사재단, 2013), pp. 4-37.

3) 김일철·유지희, “병원PR에 관한 실무자들의 인식 유형,” 『주관성 연구』 30권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15), pp. 5-26.

4) 민 희·김창남, “386세대의 정치적 태도 연구,” 『주관성 연구』 17권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08), pp. 23-44.

주관성 즉, Q 방법론(Q methodology)을 적용한 연구들도 있지만, 일반 담론 분석이나 통계적 분석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 비해 상당히 적다. 이에 비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령, ‘관계’에 대한 정부나 일반국민(공중)의 인식은 교육과 문화 등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기도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요하는 주관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양국 관계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human subjectivity) 연구에 주목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관계는 국가라는 피상적 조직을 상정하고 이 두 조직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조직 내에는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관계란 결국 그 조직 구성원들의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의 총합이다. 따라서 사안별, 집단별로 세분화해서, 그리고 그 사안은 구체적일수록 집단은 세부적일수록 인식 규명을 명확히 할 수가 있다.⁷⁾

본 연구에서는 1) 어떤 대상에 대한 주관성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 각각 PR 대행사에 근무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자 즉,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 태도 등 주관적 인식의 틀인 스키마타를 발견하고 각 특성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아울러 2) 연구 문제 1에서 발견된 인식 유형 특성들을 토대로 국가별 유사 및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있어 갈등의 원인을 줄이고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또 하나의 연구목적이다.

기본적으로 주관성 연구는 인구학적 속성에 의해서 유형이 나뉘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집단 내에 기본적으로 ‘주관적 결속력(subjectivity solidarity)’이 있으며,⁸⁾ 이는 객관적인 현실을 꼭 따르는 것은 아니더라도 ‘심리적 사실(psychological real)’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스티븐슨(W.

5) 임도경, “정치부 기자들의 정치인 인식 유형 연구,” 『주관성 연구』 17권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08), pp. 67-82.

6) D. B. Thomas & L. R. Bass, “Defining Obama: The Political Subjectivity of Presidential Identity and Authenticity in the Public Mind,”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Vol. 9, No. 1 (2011), pp. 27-58.

7) N. Luhmann 저, 윤재왕 옮김, 『체계이론 입문』 (서울: 새물결, 2014).

8) M. S. Sommer, “Product Symbolism and the Perception of Social Strata,” in S. A. Greyser (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64), pp. 200-216.

Stephenson)이 언급한 ‘심리적 이벤트(psychological event)’⁹⁾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계량적 평균에 의한 집단 간 비교가 아닌 한국과 일본 PR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양국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의 특성들을 이해,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유사점이나 차이점 등을 분석할 수 있겠다. 이것은 양국 간 관계개선을 위한 보다 실증적인 방법 혹은 전략을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논의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일본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인 가토 다쓰야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다음날 ‘일본 외무성이 2015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다’는 보도가 국내 한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다.¹⁰⁾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공유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또, 외교문서에서 그러한 표현을 삭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치’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마땅히 규범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옳은 것이나 바람직한 것. 개인이 좋아하거나 싫어함과 관계없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¹¹⁾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규범이나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가치이고 보면, 이념적 대립이 없는 한 이웃한 국가 간에 이러한 가치는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가치’라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것은 상대국과의 공유 가치(일

9) W. Stephenson, “The Quantization of Psychological Events,” *Operant Subjectivity*, Vol. 12, No. 1, 2 (1998-1989), pp. 1-23.

10) “외교부 “韓·日 부담 사라져” 아베 “兩國관계 전향적 영향,” 『조선일보』, 2015년 12월 19일, 사회 A10면.

11)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4996&cid=40942&categoryId=3143> (검색일: 2016년 10월 12일).

부)를 거둬들인다는 즉, 공유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일 관계와 관련된 여러 학회나 제 단체들의 연구논문이나 보고서들을 보면, 국가 간 가치 문제를 다룬 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가치를 반영하는 조사가 몇몇 있지만 이 역시 단순히 상대국에 대한 인식 또는 의식을 묻는 조사(2)에 한정될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 한일 관계와 관련한 연구들은 양국 간의 역사적 사실 해석,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한일 관계 태도 또는 인식, 정권별 정치지도자의 행동 또는 태도 방식, 시민단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양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조사들을 통해 한일 국민들도 양국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2015년 NPO와 동아시아연구원의 공동 여론 조사에서 양국이 서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이유로 한국과 일본 양측은 역사 문제(한: 74%, 일: 74.6%), 독도 문제(한: 69.3%, 일: 36.5%), 상대국 정치가의 발언(한: 24.7%, 일: 28.1%)순으로 응답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신뢰도는 37%(2014년 기준 18%),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17%(2014년 기준 15.6%)로 나타났다.¹³⁾ 또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한일 관계는 부정적(70%)이며,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78.4%)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독도영유권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역사 쟁점 문제라고 언급했다.¹⁴⁾ 즉, 양국 정부가 역사 인식이나 영토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조를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국민들도 양국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관련 포럼이나 한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양국이 여러 상황들로 인해 관계가 좌우되고는 있지만, 한일 지도자들의 리더십, 양국정치 특수한 상황,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정치의

12) KBS-NHK, “한일 공동 국민인식 조사”(KBS 방송문화연구소, 2010); “한일 국민감정, 반일 혐한 줄었지만 위안부합의 평가엔 극과 극,” 『한국일보』, 2016년 5월 12일, 1면; 박선영, “한국병합 100년과 한일 언론: 병합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의 갭,” 『언론과학연구』 제11권 제2호(한국지역언론학회, 2011), pp. 181-214.

13) 박석원, “2016 한일 국민감정, 반일 혐한 줄었지만 위안부합의 평가엔 극과 극,” 『한국일보』.

14) 신경애 (2015), p. 182.

변화가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¹⁵⁾는 평가이다. 이외에도 선행연구들을 통해 한일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역사인식과 정치 지도자 및 언론의 역할과 태도, 국제 정세의 영향 등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먼저, 양국의 역사인식과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양국의 관계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⁶⁾ 그간 양국의 역사인식 문제는 주로 정부 차원에서 정치·외교적 현안으로 다뤄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립 중이며, 이는 한일 국민 간의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켜 갈등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되고 있다.¹⁷⁾ 양국 관계 전문가들도 한일 관계에서 일반국민은 제외된 채 대부분 정치인과 엘리트 중심으로 교류가 일어나다 보니 일반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⁸⁾ 독도 명칭에 대한 논란, 그리고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權原)을 부정하는 등의 일본의 태도도 양국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¹⁹⁾

또한 양국 지도자의 역사인식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독도 방문과 천황에 대한 사죄 요구 발언이 한일 관계 악화에 발단이 되었음은 물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 지도부의 역사 인식 한계도 양국 정부와 국민들 간에 오해와 원망을 쌓게 되었다.²⁰⁾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역사 문제,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대립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정치 지도자의 편협한 역사인식이 얼마나 국가 간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²¹⁾ 양국의 전문가들 역시도 한일(일

15) “‘한일 외교 관계 위기단계 넘었다’ 한일언론인포럼 참가기,” 『경향신문』, 2014년 10월 21일.

16) 정재정 (2013), pp. 4-5.

17) 정재정, “한일협력과 역사문제 — 갈등을 넘어 화해로,” 『일본연구논총』 제43호 (현대일본학회, 2016a), p. 83.

18) “한일 정치권, 역사 문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동아일보』, 2015년 9월 2일.

19) 박진오 (2010), p. 59.

20) 이동준 (2016a), p. 39; 정재정 (2013), p. 61; 남상구,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제46집 (한일관계사학회, 2013), pp. 227-267; 양기웅, “한일관계와 역사 갈등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연구』 제17집 2호 (영남국제정치학회보, 2014), pp. 171-191.

21) 정재정 (2013), pp. 4-37; 정재정 (2016a), pp. 81-82.

한) 간에 역사인식과 의식구조 등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²²⁾ 물론 한일 양국 정부가 한 목소리로 ‘미래 지향’을 외치고 있지만 한국 측은 ‘과거 직시’를 강조하는 반면, 일본 측은 한일회담에서 완결된 문제인 만큼 더 이상 과거사 언급을 거론하지 말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서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치지도자의 역할 즉,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또는 자국)의 의사를 표현하며, 어떻게 외교적 타협을 전개하는지도 한일 관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²³⁾ 한국의 경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대일 강경 자세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급격히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과거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한일 정상회담부터 2015년에 합의된 위안부 문제 등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사례들을 보면, 한국의 외교 수완에 미흡한 점이 들어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²⁴⁾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전 수상과 아베 총리의 반복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아베 수상이 종군위안부의 강제동원에 대한 반복적 부인은 정치적 리더십의 독특한 성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일 관계에도 갈등을 부추긴 결과라 할 수 있다.²⁵⁾

한편,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국제 정세도 무시할 수 없다. 한일 관계도 국제질서 속에서 규정되는 부분이 확대되어 한국이 한일 관계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다. 또한 미국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지는 않지만 미국의 역사인식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이며, 한국이 지나치게 역사에 집착하는 것도 한미 관계와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

22) 이동준, 『불편한 회고: 외교사료로 보는 한일관계 70년』 (서울: 삼인, 2016b), p. 6.

23) 김상준, “한일관계의 안정과 지속: 정치지도자의 메시지 전달과 정향을 중심으로,” 『日本研究論叢』 제41호 (현대일본학회, 2015), pp. 107-132; 이원덕, “한일관계와 역사마찰: 김영삼 정권의 대일 역사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40호 (현대일본학회, 2014), pp. 1-28.

24) “불가역적인 위안부 협상이 남긴 5가지 불가피한 의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년 12월 30일.

25) 김호섭 (2009), pp. 59-83; 박진우,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한일관계의 상호인식,” 『일본사상』 제27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4), pp. 101-129.

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미국 지식계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어 한·미·일 공조를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여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추세이며,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도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일본 연구를 필두로 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친밀감도 형성되어 있고 일본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받기 때문에 친일적 감정이 우선시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²⁶⁾

또한 한일 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론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공중들은 미디어 보도를 통해 자국 밖의 세상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이슈나 쟁점 상황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는 외국 공중의 여론에 영향을 미쳐 이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²⁷⁾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양국의 언론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보다는 상대 국가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보도하거나 사실과 균형에 입각한 보도와 논평 대신 상대국에 대한 폄하와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로 채우면서 반일감정 또는 혐한감정을 유발시키고, 결국 양국의 갈등을 부추기는 형세로밖에 볼 수 없다.²⁸⁾

이처럼 국가 간 관계 특히 한일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불특정 다수의 평균적 결과물을 토대로 한 양국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의식에 대한 조사나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 등 객관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상 국가 간의 공중들이나 국가 관계 전문가들의 각국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주관적 세계에 대한 연구들은 간과됨으로써

26) 진창수 (2014). pp. 25-26.

27) E. Gilboa, "Secret Diplomacy in the Television Ag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Vol. 60, No. 3 (1998), pp. 211-225; J. Wang and T. Chang, "Strategic Public Diplomacy and Local Press: How a High-profile "Head-of-State" Visit was Covered in America's Heartland," *Public Relations Review*, Vol. 30, No. 1 (2004), pp. 11-24; J. Zhang and W. L. Benoit, "Message Strategies of Saudi Arabia's Image Restoration Campaign After 9/11," *Public Relations Review*, Vol. 30 (2004), pp. 161-167; J. Zhang, Q. Qui and G. T. Cameron, "A Contingency Approach to the Sino-US Conflict Resolution," *Public Relations Review*, Vol. 30, No. 4 (2004), pp. 391-399.

28) 김성해, "한국 신문의 중국과 일본 보도의 프레임과 담론분석: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996~2005," 한국언론재단 편, 『미디어에 나타난 이웃: 한·중·일 언론의 상호국가보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6), pp. 27-57; 박형준, "한일 신문의 프레임과 주관적 표현 비교를 통한 갈등 조장 여부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4), pp. 37-66; 이창현, "한일 관계와 뉴스 보도의 프레임, 그리고 상호인식," 『인문사회과학연구』 Vol. 18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pp. 109-127.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 관계에 관한 공중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한 개인의 과거 경험 속에 깊게 뿌리내린 마음의 상태 즉 주관적 인식 구조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적 접근을 적용하고자 한다. Q는 인간의 주관성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사회현상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한 탐사적(exploratory) 특징과 관련된 것으로 발견을 통해 이론적으로 대안적 시각을 제공하며,²⁹⁾ 기존의 양적 방법론에서는 인식할 수 없었던 이론적 틀과 구체적 방법을 조명해 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한정호³⁰⁾는 PR 대행사에서 근무하는 PR인들의 PR 업무와 목표, 효과, 직업의식과 윤리 등 PR 업무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로 모든 부분에서 PR의 역할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필요한 것이라 믿는 ‘PR지상주의자들,’ PR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실적 어려움이나 한계를 잘 인지하고 보다 기능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PR 경영주의자,’ PR이라는 직업에 대해 관념적인 원칙과 이상에 충실하는 ‘관념적 이상주의자들,’ PR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인정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 PR 효과를 인정하는 ‘전통적 효과론자’로 나타났다. 임도경³¹⁾의 연구에서는 정치부 기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 유형을 발견했는데 전체적 맥락 속에서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고 해석해 주는 역할을 자임하는 ‘맥락 해석 중심형,’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체과와 밀착해 그 인물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특성을 보이는 ‘취재원 밀착형,’ 사실 중심의 기능적 관점으로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능 위주 판단형’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Q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독립, 종속 변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의 연구가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원(요인 또는 유형)을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갖는 사람들 사이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으로도 의의가 있다.

29) F. N. Kerlinger, “Q Methodology in Behavioral Research,” in S. R. Brown & D. J. Brenner (eds.), *Science, Psychology, and Communi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72).

30) 한정호, “PR 실무자의 PR 업무 역할에 대한 인식의 유형분석연구,”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한국언론학회, 2002), pp. 349-385.

31) 임도경 (2008), pp. 67-82.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Q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수행하였다. Q 방법론은 스티븐슨(Stephenson)³²⁾이 창안한 것으로 여러 사회현상이나 이슈들에 대한 느낌, 관점, 신념 등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방법론이다. 이것은 기존의 가설 검증을 통한 가설연역적 연구방법과는 달리 가설생성(abduction) 또는 가설발견을 위한 방법론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령, 성별, 사회계층 등의 인구학적 속성을 사용하여 계량적 평균에 의한 집단 간 비교나 특정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주관성 연구는 다수의 표본(사람)을 통해 일반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내에서 특정 지워지는 주관적 특성 즉, 유형을 발견하여 가설생성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소표본의 원칙(small sample doctrine)을 따르며, 의미성에 있어 개인 내의 차이를 확인하고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자결적 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도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³³⁾

따라서 본 연구가 추구하는 연구목적인 한일 간 관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PR(관계) 전문가의 양국 관계에 대한 태도, 의견, 관점 등의 인식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계 전문가들은 한편으로는 공중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제3자적 입자에서 작은 단체, 기업, 정부,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과 그 해당 공중 간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과 유지 혹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주로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PR(관계) 전문가의 양국 관계에 대한 태도, 의견, 관점 등의 인식 구조 즉 인식 유형을 발견하는 것이 국가 간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다 다양

32) W. Stephenson,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33) 김홍규,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pp. 78-81, 113-114.

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주관성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Q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절차

1) Q 모집단 구성 및 Q 표본 선정

Q 표본(Q sample)은 Q 모집단(Q population)에서 추출된 것이다. Q 모집단은 모든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각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의 총체이자 무수한 진술문들의 집합이며, 한 문화 내에서 공유하고 교감할 수 있는 모든 인간 경험의 통합체(concourse)라 할 수 있다.³⁴⁾ Q 모집단에 해당되는 각 진술문들은 객관적인 사실(fact)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고 틀린지 검증하는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로 표현되거나 해석될 수 있고, 사용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³⁵⁾

Q 모집단은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신문 기사나 논문, 책 등 관련 문헌을 통해 수집을 할 수도 있지만 연구목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특정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부터 관심이 많은 사람들까지 면담을 통해 다양한 생각, 의견들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의견, 생각들을 정리하여 진술문을 만들게 된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해 대표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Q 표본을 선정한다.

그리고 Q 표본을 표집할 때 특정 이론에 근거하거나 선택된 변인들에 맞추어 구조화된 표본의 형태로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표본을 사용할 수 있

34) 김홍규 (2008), pp. 43-44; Stephenson (1953).

35) W. Stephenson, "Applications of Communication Theory: I. The Substructure of Science," *Psychology Record*, Vol. 23, No. 1 (1972), pp. 17-36.

다. 하지만 Q 방법론에서는 인간의 주관성을 탐구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외부적 관점이나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고 피험자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문 즉 Q 표본을 범주화시키지 않고 작성하여도 연구의 타당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³⁶⁾

본 연구에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한 논문, 신문기사, 서적 등의 기초 자료와 PR 전문가들(한국인 4명, 일본인 3명)을 대상으로 현재 한일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갈등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심리적 요소들이나 언론의 역할, 외교 관계자들의 역할,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 등 한일 관계를 둘러싼 개방적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터뷰를 통해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Q 모집단을 대략 40여 개 수집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PR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Q 표본(진술문)을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수집된 Q 모집단 즉, 진술문들 중 한국과 일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배제시켰다. 그런 다음, 진술문의 의미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은 정리한 후, 한일 관계와 관련해 대표성이 있는 진술문들을 중심으로 동의(찬성, 긍정)와 비동의(거부, 부정), 중립 등으로 조정하여 <표 1>과 같은 비구조화 표본 형태로 30개의 Q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그다음으로 피응답자인 P 표본이 각각의 Q 표본을 Q 소트지(분포도)에 잘 분류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명함카드 크기의 종이에 Q 표본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각각의 P 표본에게 동일한 주제로 연구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용한 Q 표본은 최대한 한국에서 사용한 Q 표본과 동일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에 특히 유의하였다.

2) P 표본

P 표본은 Q 표본(진술문)을 분류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피험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양적 방법론에서는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36) W. S. Neff and J. Cohen, "A Method for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Internal Consistency of Q-sort Arrays," *Psychological Bulletin*, Vol. 68 (1967), pp. 361-368; D. M. Sundland, "The Construction of Q Sorts: A Criticism," *Psychological Review*, Vol. 69 (1962), pp. 62-64.

〈표 1〉 Q 표본(진술문)

번호	Q 표본
1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	경제적 차이가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3	문화적 차이가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4	지정학적 조건(섬나라: 대륙 반도)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5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6	통치권자의 개인적 가치관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7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8	우리 국민의 정서는 항상 옳다.
9	국민정서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10	한번 형성된 사람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11	국가 간 태도는 타고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12	국가 간 태도는 개개인의 지적 수준과 연관 있다.
13	국가 간 태도는 개인의 상대국에 대한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4	이웃한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좋을 수 없다.
15	진보보다는 보수 정권이 갈등을 더 조장하는 편이다.
16	한일 관계는 양국의 언론은 정부의 대외 정책이나 지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7	개인의 이해관계가 국가 간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	언론의 노력으로 국가 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19	전문가집단(예, 지식층)의 노력으로 국가 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20	관계 전문가(PR 대행사)의 노력으로 국가 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21	시민단체(NGO)의 노력으로 국가 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22	국가 간 관계개선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보다는 민간에 의한 상향식이 더 효과적이다.
23	SNS의 발달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24	한류의 확대는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25	WTO나 FTA 등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26	중국의 부상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27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28	남북의 평화적 통일 추진 과정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29	사회의 고령화는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30	순수 민간단체의 상호방문 확대는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31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응답자 즉, 표본을 요한다. 하지만 Q는 일반화를 연구의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유형 즉, 가설을 발견해 가는 가설추론(abduction)의 논리를 추구³⁷⁾하고 있다. 따라서 Q에서는 소표본 원칙(small sample doctrine)에 따라 P 표본 수는 유형(요인)을 생성하고 유형 간 비교가 가능할 정도의 수면 충분하다.³⁸⁾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Q 소터)인 P 표본은 홍보대행사(PR Agency)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국가 간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정치나 역사, 외교, 교육 등 특정 분야에 치중된 전문성을 배제하고 가급적 관계 그 자체에 주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홍보대행사는 작게는 특정 기업의 재화나 용역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브랜드나 정책 홍보에 이르기까지 조직과 그 해당 공중 간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과 유지 혹은 개선에 관한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국가 간 관계인식에 관한 이해는 이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가에 따른 비교 분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각각 PR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5년 9~10월 한국PR기업협회 회원사 월례 모임 참가자 가운데 부장급 이상의 전문가 중에서 34명을 선정했다. 그리고 일본은 2016년 3~5월 국제PR협회(IPRA)의 일본 지부 대표자(JPRA) 정기 모임 참석자 중 29명을 선정하였다.

3) Q 분류

Q 분류는 Q 분포도 모형에 따라 Q 표본들을 피험자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Q 표본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이 아니라 Q 분포도 모양을 바탕으로 피험자(응답자, Q 분류자) 스스로 주어진 Q 표본들을 상대적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 강제분포(forced-distribution)시키는 것이다.³⁹⁾ 따라서 완성된 Q 소트(분포도)는 피험자가 자결적으로 만든 스키마타의 형태이며, 한 개인 내의 마음의 상태이자 자신을 투사

37) Stephenson (1953).

38) 김홍규 (2008), pp. 113-114.

39) 김홍규 (2008), pp. 120-121; S. Brown,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0), pp. 21-22.

〈그림 1〉 Q 분류를 위한 분포도

카드 수	2	4	6	7	6	4	2
점수(변환점수)	-3(1)	-2(2)	-1(3)	0(4)	+1(5)	+2(6)	+3(7)

가장 비동의 ← ← 중립 → → 가장 동의

시킨 하나의 구조물(operand framework)⁴⁰이라 할 수 있다.

Q 분류 작업을 위해 연구자는 P 표본에게 카드놀이 하는 것처럼 31개의 Q 표본(진술문)을 나눠주고 각 진술문들을 모두 읽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한 후 각 진술문들이 동의, 중립, 동의하지 않는 것 중 어느 한 그룹에 속하도록 분류케 했다. 그런 다음, <그림 1>과 같은 분포도 모양에 따라 가장 동의하는 것(+3)에서부터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3)까지 분류하도록 했다. 또한 양극단(+3, -3)에 놓인 각각 3개의 진술문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Q 유형을 해석하는 데 참고하였다. 아울러 위의 과정들은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4) 분석 프로그램 실행

Q 분류 작업을 통해 수집된 Q 분포도는 분석 프로그램인 QUANL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점수 변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Q 분포도에서 가장 비동의하는 경우(-3)를 1점으로 시작하여 2점(-2), 3점(-1), 4점(0), 5점(+1), 6점(+2), 7점(+3)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그런 다음, 부여된 각 점수와 P 표본에 대한 정보, Q 표본 등을 텍스트 파일에 입력, 저장시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QUANL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저장한 텍스트 파일을 불러들인 후, 비이론적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통한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행했다.

40) Brown (1980), p. 6.

IV. 연구결과

1. 한국인의 결과 분석

먼저 유형 개수의 경우, QUANL 프로그램을 통해 몇 가지 유형의 개수를 지정하여 다양하게 돌려본 후 결과 자료를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때 유형의 개수를 지정해서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지정한 개수와 동일하게 유형이 나뉘질 수도 있지만 지정한 개수보다 적게 또는 많게 유형이 나뉘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각 결과 자료에 나타난 아이겐값, 유형별 요인가중치, 유형 간 상관관계계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지점에서 판단하는 스크리(scree) 검사를 비교하여 최종 유형의 개수를 정한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인 관계 전문가들의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유형이 발견되었다. 즉, 제1유형은 ‘지배논리형,’ 제2유형은 ‘환경수용형,’ 그리고 제3유형은 ‘교류의존형’이다. 각 유형별 아이겐값은 11.1734, 2.2525, 1.9026순이며, 총 변량은 0.4508로 본 연구 결과가 약 45%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간의 상관관계계수는 제1유형과 제2유형 간 0.647, 제1유형과 제3유형 간 0.560, 제2유형과 제3유형 간 0.529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유형 간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다.

다음은 각 유형별 해석이다. Q 유형은 특정 주제에 대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자결적 조합이며, 어떤 특성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 내에서 특정 지워지는 주관적 특성이라 이해할 수 있다.⁴¹⁾ 유형 해석은 특정 이론의 시각으로부터 연구에서 발견된 유형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별, PR 경력, 국제 클라이언트 경험 유무 등의 인구통계적 정보, Q 분류 작업 후 양극에 해당되는 진술문(본 연구에서는 +3, -3)에 대한 추후 인터뷰 자료, 각 Q 유형별 점수표(표준점수 ± 1.00 이상에 해당되는 Q 진술문)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특히 Q는 강제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Q 표본들이 동일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주어진 Q 표본들 사이에서 일련의 순위 매기기를 통한

41) 김홍규 (2008), pp. 161-162.

분류 작업에 의해 자신의 주관성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Q는 상호 배타적인 범주를 가정하지 않고 각 유형은 전형성(prototype)을 가진다.

1) 제1유형: 지배논리형

제1유형은 ‘지배논리형’으로,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외교적 분쟁 또는 협력이나 교류 등의 문제들은 현재 집권 정당, 또는 국가 통치권자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의해 좌우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인접한 국가라는 지리적 상황이나 양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들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타 유형들과는 달리, 양국 간 갈등 발생 시 언론이나 사회 지식층이 중간자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제1유형에 국제 클라이언트를 경험해 본 PR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속해 있다는 것이다. 짐작해 보건대 그들의 경험상, 국가별 지배적인 힘의 논리가 국가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배적인 힘의 논리가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관점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국가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들은 국민들의 인식과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제3자의 협력이 효과적이었던 경험들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은 아닌

〈표 2〉 (한국) 제1유형(지배논리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Z) ± 1.00

번호	Q 표본	표준점수
5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85
1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62
18	언론의 노력으로 국가 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1.46
6	통치권자의 개인적 가치관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45
19	전문가집단(예, 지식층)의 노력으로 국가 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1.27
13	국가 간 태도는 개인의 상대국에 대한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13
4	지정학적 조건(섬나라: 대륙 반도)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26
27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30
29	사회의 고령화는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31
14	이웃한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좋을 수 없다.	-1.37
11	국가 간 태도는 타고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1.57
8	우리 국민의 정서는 항상 옳다.	-1.87

지 예측해 볼 수 있다.

제1유형은 역사에 대한 이해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하고 국가별, 세대별, 더 나아가 개인별로 주관적이며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이해하기 쉬우며, 이는 후대에까지 전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되어 결국 양국 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대신 제1유형은 타 유형들과 달리, 한일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언론이나 전문가집단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경험을 통해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자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소식을 TV나 신문,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먼저 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양국의 언론들이 자국 또는 상대국을 어떠한 논조로 전달하는지에 따라 수용자 즉, 국민들의 인식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양국 간의 외교나 역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관계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한일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양국의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한 경험, 이를테면 어떠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가 편견으로 자리 잡거나 아니면 상대국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대국에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도 작게나마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한다.

2) 제2유형: 환경수용형

제2유형은 ‘환경수용형’으로 양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나 인식의 차이가 그간 한일 관계에 갈등 또는 대립 구조를 만들어 냈었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무시하기 어려우며, 가장 지배적인 것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제2유형은 한국과 일본의 주변국이라 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좌우된다고 판단한다. 즉, 제2유형은 벗어날 수 없는 역사 이해나 지정학적 조건, 인접국과의 이해관계 등의 불가피한 환경적 요인들이 결국은 양국 관계에 갈등을 빚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를테면, 제2유형은 일본의 경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시각은 희박하고, 한국은 위안부 등 일본과 얽힌 과거사에 대한 피해자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세대교체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갈등이 거듭 반복되는

〈표 3〉 (한국) 제2유형(환경수용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Z) ±1.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16
4	지정학적 조건(섬나라: 대륙 반도)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60
7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60
5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34
3	문화적 차이가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27
26	중국의 부상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00
27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10
14	이웃한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좋을 수 없다.	-1.28
10	한번 형성된 사람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1.40
11	국가 간 태도는 타고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1.76
8	우리 국민의 정서는 항상 옳다.	-2.31

것이라고 본다. 특히나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한국과 일본은 독도영유권 등과 관련해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역시도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양국 간의 역사 인식차가 커서 나타난 결과물이라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들 역시 문화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와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결국 국가 간의 갈등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 정당의 정치적 성향들이 또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양국 간에 우호적 또는 대립적인 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제2유형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웃한 처지이나 이러한 조건이 한일 관계에서 때로는 득이 되거나 또는 악조건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즉, 제2유형은 타 유형들과는 달리 섬나라인 일본, 그리고 대륙 국가이면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이 문화 교류나 경제 협력 등을 하는 데 유리할 수 있지만, 역사적·정치적 문제 이외에도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시설 등 주변 인접국의 상황에 따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생기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3) 제3유형: 교류의존형

제3유형은 ‘교류의존형’으로 제1, 2유형과는 달리 민간 차원의 교류가 양국 관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한다. 물론 역사 인식이 국가에 따라 다르고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로 인해 수십 년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에서 역사 이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권 또는 통치권자의 힘의 논리가 언론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들은 상대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쳐 결국 한일 간에 긍정 또는 부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배 세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일 간의 문화적 교류나 민간단체를 통한 한일 간 직·간접적인 왕래나 양국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적 상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의 문화나 타 국민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양국 모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제3유형은 언론이 정부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양국 간의 이슈들을 전달하는 언론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성은 Q 방법론을 적용한 김일철과 김승일의 한국 언론인들의 공정성 인식 유형 연구에서 나타난 유형 중 ‘샐러리맨형’의 특성과 비교해볼 수도 있다.⁴²⁾ ‘샐러리맨형’의 경우, 외부 영향력이나 상업주의가 공, 관료형 다섯 가지로 보았는데 이 유형들은 언론과 언론인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외부 압력이나 상업주의가 작용할 경우 공정성은 더욱 보장할 수 없다는 특성을 보였다. 즉, 본 3유형에서도 언론이나 정부라는 외부 영향력이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보다는 그들의 힘에 의해 편향적이거나 자국 중심의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SNS로 국민들이 정보를 얻고 여론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국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타 유형들과 달리 제3유형은 보수 정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42) 김일철·김승일, “언론인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주관성 연구』 통권 제18호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09), pp. 25-39.

즉, 이들이 한일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다른 의견들은 묵살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강요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국민감정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도 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 관계에서도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한다. 어찌 보면, 한일 간의 갈등 형성은 문화적 차이나 중국의 위상으로 인한 변화 등의 외부적 요인보다는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인용된 김일철과 김승일의 연구에서 나타난 유형 중 나타난 유형 중 ‘샐러리맨형’의 특성과 비교되기도 한다. 관료형인 경우 외부 영향력이나 상업주의가 공·관료형 다섯 가지로 보았는데 이 유형들은 언론과 언론인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외부 압력이나 상업주의가 작용할 경우 공정성은 더욱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제3유형은 과거부터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들 간의 관계가 우호적 또는 대립적으로 변하기도 했기 때문에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대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국가 간에 경제 교역이나 교류가 활발해져서 서로 등지고 있는

〈표 4〉 (한국) 제3유형(교류의존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Z) ± 1.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31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74
7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57
16	언론은 정부의 대외 정책이나 지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54
6	통치권자의 개인적 가치관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54
1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29
15	진보보다는 보수 정권이 갈등을 더 조장하는 편이다.	1.07
30	순수 민간단체의 상호방문 확대는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01
3	문화적 차이가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03
23	SNS의 발달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22
11	국가 간 태도는 타고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1.34
26	중국의 부상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43
10	한번 형성된 사람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1.56
8	우리 국민의 정서는 항상 옳다.	-2.18

사이라 할지라도 관계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믿고 있다. 또한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교류가 상대국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 양국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한국인들 간의 합의 항목

합의 항목(consensus item)은 유형에 따른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모든 유형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들에 해당된다.⁴³⁾ 한국의 관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형성된 역사 인식 체계가 상대국에 대한 편견이나 피해의식 등의 입장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 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통치권자의 신념과 추구 가치에 따라 한일 관계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한 자국민의 정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 등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로 여러 국가들과 이웃할 경우에도 관계를 어떠한 식으로 맺느냐에 따라 우호적 또는 대립적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웃한 나라라고 해서 관계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표 5〉 (한국) 합의 항목과 표준점수(Z) ± 1.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69
6	통치권자의 개인적 가치관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19
14	이웃한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좋을 수 없다.	-1.19
10	한번 형성된 사람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1.26
11	국가 간 태도는 타고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1.56
8	우리 국민의 정서는 항상 옳다.	-2.12

43) 김홍규(2008), p. 64; Brown(1980), p. 26.

2. 일본인의 결과 분석

일본인 관계 전문가들의 한일 국가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유형이 발견되었다. 유형 A는 ‘여론의존형,’ 유형 B는 ‘시대상황형,’ 그리고 유형 C는 ‘여건중시형’이다. 각 유형별 아이젠값은 11.4973, 2.7925, 1.8570순이며, 총 변량은 0.5568로 본 연구 결과가 약 56%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간 상관관계계수는 유형 A와 유형 B는 0.593, 유형 A와 유형 C는 0.597, 유형 B와 유형 C는 0.534로 유형 간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다. 다음은 각 유형별 해석이다.

1) 유형 A: 여론의존형

유형 A는 ‘여론의존형’으로 시민단체 또는 국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교류, 역사, 국가 관계 분야 등의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형성된 상향식의 여론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어떠한 대상에 대한 사람의 태도나 인식, 국민정서 등은 여러 상황에 의해서 변할 수 있고, 정부 주도로 양국 관계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양국의 시민단체들 또는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협력함으로써 일한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유형 A는 국가 간 관계개선은 민간에 의한 상향식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즉, 자국과 한국 간의 갈등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정치 지도자나 집권당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보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양국의 경제적인 발전은 물론 국민들 간의 교류가 이어지게 되면서 양국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상황이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오해나 선입견 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나 순수 민간단체들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양국의 공통 문제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국가 관계 관련 전문가나 역사학자 등 지식층 집단이 자발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국가 간의 문제나 이슈들을 논의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그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계개선을 위한 전략을 세운다

〈표 6〉 (일본) 유형 A(여론의존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Z) ± 1.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2	국가 간 관계개선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보다는 민간에 의한 상향식이 더 효과적이다.	1.54
30	순수 민간단체의 상호방문 확대는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47
19	전문가집단(예, 지식층)의 노력으로 국가 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1.31
31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15
21	시민단체(NGO)의 노력으로 국가 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1.07
14	이웃한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좋을 수 없다.	-1.19
12	국가 간 태도는 개개인의 지적 수준과 연관 있다.	-1.22
11	국가 간 태도는 타고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1.42
8	우리 국민의 정서는 항상 옳다.	-2.22
10	한번 형성된 사람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2.38

면 국가 관계개선에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유형 B: 시대상황형

유형 B는 ‘시대상황형’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얽혀 있는 과거사에 대한 국민정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오랫동안 일한 관계에서 통치권자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해차이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에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배적인 세력 말고도 언론이 어떠한 관점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이슈들을 전달하는지도 양국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지적 수준이나 상대국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얻은 느낌이나 생각들이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유형 B는 양국 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시대나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한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잣대로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 추진이나 중국의 급격한 부상 등은 근본적으로 자국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한다.

〈표 7〉 (일본) 유형 B(시대상황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Z) ± 1.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9	국민정서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1.83
6	통치권자의 개인적 가치관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71
1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37
5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22
13	국가 간 태도는 개인의 상대국에 대한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22
18	언론의 노력으로 국가 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1.18
12	국가 간 태도는 개개인의 지적 수준과 연관 있다.	1.03
27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06
14	이웃한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좋을 수 없다.	-1.18
26	중국의 부상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21
28	남북의 평화적 통일 추진 과정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43
29	사회의 고령화는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44
8	우리 국민의 정서는 항상 옳다.	-2.35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는 통치권자의 가치관이나 집권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그 시대에서 정치적 리더 역할을 하는 통치권자나 집권당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양국의 관계도 달라진다고 판단한다. 또한 역사에 대한 이해나 수용방식이 국가 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국민들의 인식이나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해도 양국 관계에 있어서 열외시킬 수 없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개개인의 지적 수준이나 상대국에 대한 개인적 경험들이 오히려 상대국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양국의 언론들이 자국의 입장에서 획일적인 험한 또는 반일보도는 지양하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대국에 대해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여론에 휩쓸리거나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국가 간의 관계개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유형 C: 여건중시형

유형 C는 ‘여건중시형’으로 각 국가에 주어진 여러 여건들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즉, 타 유형과는 달리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이로 인해 자연스레 형성되는 각 국가별 특성들은 불가피하게 양국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양국 사이에서 직접적인 관여가 낮거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 국제협정과 관련된 외부적인 사안들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유형 C는 양국 사이에서 항상 갈등요인이 되었던 역사 문제는 개인의 관점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에 있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 보고 있다. 대신 유형 C는 이미 주어져 있는 환경적 조건 즉, 섬나라인 일본과 그리고 대륙 반도로 이루어진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들이 양국이 각각 다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등에 있어서 차이를 발생시키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불가피하게 생성된다고 믿는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은 국가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발생시키기 마련이며, 문화적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국가 간 갈등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 8〉 (일본) 유형 C(여건중시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Z) ± 1.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3	문화적 차이가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44
6	통치권자의 개인적 가치관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39
31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27
4	지정학적 조건(섬나라: 대륙 반도)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22
7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09
20	관계 전문가(PR대행사)의 노력으로 국가 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1.01
29	사회의 고령화는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00
1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07
25	WTO나 FTA 등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21
26	중국의 부상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29
10	한번 형성된 사람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1.30
11	국가 간 태도는 타고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1.46
14	이웃한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좋을 수 없다	-1.67
8	우리 국민의 정서는 항상 옳다.	-1.97

이외에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국의 입지나 상황들도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양국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되거나 또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국에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 또는 요건들은 국가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양국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민간교류를 확대시키거나 국가 관계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양국 간의 갈등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한다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보다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유형 C는 사회 고령화나 WTO, FTA 등 단순히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시안으로 봐야 할 것들은 양국 관계개선에 기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의 급격한 경제적·정치적 부상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 좀 더 가까워진 반면,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소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일본인들 간의 합의 항목

각 유형별 특성들은 다르지만 일본 관계 전문가들은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이 한국과 일본 관계에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며, 국가에 대한 태도도 상황이나 주어진 여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한다. 대신에 언론에서 어떠한 태도로 양국에 대한 보도를 하는지에 따라 관계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이웃했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나 역사 문

〈표 9〉 (일본) 합의 항목과 표준점수(Z) ± 1.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5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1.02
18	언론의 노력으로 국가 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1.00
26	중국의 부상은 국가 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04
11	국가 간 태도는 타고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1.15
14	이웃한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좋을 수 없다.	-1.35
8	우리 국민의 정서는 항상 옳다.	-2.18

제, 기타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빚을 수는 있지만 항상 양국이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다.

반면에 중국의 부상으로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중국이 양국 사이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국제 정세에 어떠한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이 일한 관계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 한일(일한) 양국 관계에 대한 인식의 국가별 종합 비교 분석

이상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전문가들(PR 대행사 소속)을 대상으로 한일(일한)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 특성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양국 간의 비교 분석을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양 국가 간의 상관관계수(r)는 0.854로 한국과 일본의 국가 관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들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제시되었던 국가별 합의 항목(<표 5>, <표 9> 참조)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국가 관계 전문가들은 근접한 국가들 간의 관계는 변화무쌍해서 항상 우호적 또는 적대적일 수는 없다는 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편이었다. 또한 양국 모두 국민의 정서나 상대국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었다.

<표 10>은 한국과 일본의 각 유형들 간의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계수이며, <그림 2>는 <표 10>에 제시된 피어슨의 상관관계계수를 토대로 만든 한국과 일본 국가 관계 전문가들의 양국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한국의 제1유형인 ‘지배논리형’은 일본의 유형 B인 ‘시대상황형’과, 한국의 제2유형인 ‘환경수용형’은 일본의 유형 C인 ‘여건중시형’과,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한국의 제3유형인 ‘교류의존형’은 일본의 세 가지 유형 중 상관관계가 있는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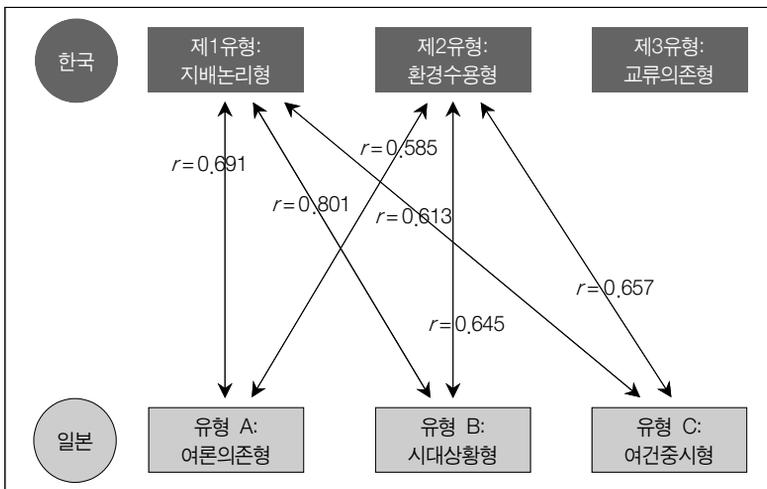
먼저, 상관관계계수가 가장 높은 한국의 제1유형 ‘지배논리형’과 일본의 유형 B ‘시대상황형($r = 0.801$)’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양국 모두 집권 정당의 정치

〈표 10〉 한국과 일본의 유형 간 피어슨의 상관관계계수

유형		(한국) 1	(한국) 2	(한국) 3	(일본) A	(일본) B	(일본) C
한국	1	1	.672**	-.264	.691**	.801**	.613**
	유의확률(양쪽)		.000	.151	.000	.000	.000
	N	31	31	31	31	31	31
한국	2		1	-.114	.585**	.645**	.657**
	유의확률(양쪽)			.540	.001	.000	.000
	N		31	31	31	31	31
한국	3			1	.032	-.178	-.048
	유의확률(양쪽)				.865	.338	.798
	N			31	31	31	31
일본	A				1	.644**	.648**
	유의확률(양쪽)					.000	.000
	N				31	31	31
일본	B					1	.563**
	유의확률(양쪽)						.001
	N					31	31
일본	C						1
	유의확률(양쪽)						
	N						31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그림 2〉 국가별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 간의 상관관계 비교



적 성향과 통치권자의 가치관이 국가 관계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 (<표 2>, <표 7> 참조). 대신에 한국의 ‘지배논리형’은 집권당의 성향이, 일본의 ‘시대상황형’은 통치권자의 가치관이 좀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두 유형은 역사에 대한 인식도 국민정서나 정치적 이념에 반영되고, 양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들이 주로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 차이가 원인이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에서 역사 이해 문제를 따로 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근접 국가와의 관계가 달라지거나 혹은 경험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태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책으로는 바로 언론의 역할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지배논리형’은 집권당이나 통치권자, 역사 이해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국가 간의 갈등은 전문가집단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면 양국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일본의 ‘시대상황형’은 한국과는 달리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국민정서가 양국 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데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이나 남북의 평화적 통일 추진 과정 등 시대나 여러 정황에 따라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우호냐 대립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제1유형 ‘지배논리형’과 일본의 유형 A ‘여론의존형($r = 0.691$)’을 비교해 볼 때, 양국 모두 양국의 전문가집단들이 중립적인 태도로 서로 협력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여러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한일(일한) 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대국에 대한 자국민의 태도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치적 힘이나 여러 개인적인 경험들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인식한다(<표 2>, <표 6> 참조).

하지만 한국의 ‘지배논리형’은 집권 정당이나 통치권자의 가치관, 역사 이해 등의 지배적인 힘이나 논리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좌우된다고 인식하는 반면, 일본의 ‘여론의존형’은 상대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양국 간의 민간교류나 시민단체의 역할 등으로 형성된 국민 여론이 한일 관계개선에 힘을 줄 수 있다

고 생각한다.

한국의 제2유형 ‘환경수용형’과 일본의 유형 C ‘여건중시형($r = 0.657$)’의 특성들을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이 각각 대륙 반도와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조건 또는 인접한 주변국의 위상, 그리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화 등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환경적 여건이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조건들이 양국 간의 긴장감 조성이나 갈등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원인이라는 데도 동감하고 있다. 또한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이나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태도도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들로 인해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국가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표 3>, <표 8> 참조).

하지만 한국의 ‘환경수용형’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에게 지배적이었던 역사 인식 또는 이해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분리시켜 볼 수 없는 주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의미에서의 환경수용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의 ‘여건중시형’은 역사에 대한 이해는 양국 관계를 좌우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보지 않고 대신 환경적·문화적 요인, 전문가들의 역할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일 간 관계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이 크다. 또한 한국은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을, 일본은 통치권자의 개인적 가치관이 한일 간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점에서도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제2유형 ‘환경수용형’과 일본의 유형 B ‘시대상황형($r = 0.645$)’을 비교하면, 양국 모두 중국의 부상이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집권당의 성향이 정권교체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미리 예측하기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까지 양국의 갈등을 만들어 온 역사 인식 문제도 양국 관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수용형’은 지정학적 조건이나 인접한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등 불가피하게 주어진 환경적 요인들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반면, 일본의 ‘시대상황형’은 시대에 따라 국민정서가 변하고 상대국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나 지식들이 양국 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표 3>, <표 7> 참조).

이외에도 한국의 제1유형 ‘지배논리형’과 일본의 유형 C ‘여건중시형($r = 0.613$)’을 비교해 보면, 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태도는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아니면 통치권자의 개인적 가치관 등 지배적 힘의 논리 또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타고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또한 사회 고령화와 같은 한일(일한)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공감하는 이슈들은 한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빚는다거나 아니면 관계개선을 위한 요인으로 생각진 않는다. 반면, 한국의 ‘지배논리형’의 경우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지 않으나, 일본의 ‘여론중시형’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나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들이 국가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표 2>, <표 8> 참조).

마지막으로 한국의 제2유형 ‘환경수용형’과 일본의 유형 A ‘여론의존형($r = 0.585$)’의 경우, 국가 간의 관계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이웃해 있다고 해서 항상 관계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에 의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정서나 상대국에 대한 태도도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표 3>, <표 6> 참조).

반면에 한국의 ‘환경수용형’의 경우 역사 이해나 지정학적 주변국과의 관계, 문화 차이 등 주어진 환경들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며,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일본의 ‘여론의존형’은 갈등의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양국 사이에서 발생할 때 민간 차원에서 형성한 여론이나 시민단체나 개인 간의 순수한 교류 등으로 이루어진 관계들이 양국 간 관계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

V. 결론 및 함의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각각 관계 전문가(PR 대행사 소속)를 대상으로 1) 한일 관계에 대한 각각의 인식 유형을 발견하고, 2) 각 국가별 유형 특성들을 비교분석 후, 이를 통해 한일 간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 연구목적이다.

먼저, 한국 관계 전문가들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은 각각 제1유형은 ‘지배논리형,’ 제2유형은 ‘환경수용형,’ 그리고 제3유형은 ‘교류의존형’이었다.

‘지배논리형’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통치권자의 개인적 가치관이 양국 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힘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무시할 수 있는 지배적인 힘의 논리로써 보고 있다. 이는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대일 강경 자세나 일본 수상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정치지도자의 태도나 개인적 가치관이 결국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 외교적·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협상의 조건으로 사용되거나 갈등으로 발전된 일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⁴⁴⁾

따라서 ‘지배논리형’은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양국의 언론들이 왜곡된 보도를 지양하며,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한일 관련 학자나 외교 관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과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상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견인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힘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양국 정치인들이 한일

44) 박진오 (2010), pp. 47-64; 김상준 (2014), pp. 107-132; 김호섭 (2009), pp. 59-83; 박진우 (2014), pp. 101-129; 이원덕, “한일관계와 역사마찰: 김영삼 정권의 대일 역사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40호 (현대일본학회, 2014), pp. 1-28; 정재정 (2016a), pp. 65-93.

관계를 정권의 도구로서 외교 관계에 악용하는 태도는 지양하며,⁴⁵⁾ 한국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는 한일 관계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에 대해 큰소리를 치지만, 막상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이중적인 태도⁴⁶⁾도 한일 관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인들 스스로 성찰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환경수용형’은 역사에 대한 양국의 이해차이나 지정학적 조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국민들 간의 오해, 중국, 북한 등의 주변국과 미국, 러시아 등과의 이해 관계구조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의 주원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로 인식한다. 사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인식의 출발점이 다르고,⁴⁷⁾ 그러다보니 양국 간에는 역사인식 등에 따른 이견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⁴⁸⁾ 따라서 ‘환경수용형’은 한일 모두가 역사에 대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서로 다른 역사를 그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를 무리하게 극복해서는 안 된다. 대신 양국의 역사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인식 차를 좁히려 노력하고, 양국의 국민들에게도 사료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대일 관계에 대해 일본 탓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당시의 외부 환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려는 자세도 요구된다. 또한 문화적 차이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일 간의 갈등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악조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가 통치자와 정부의 외교 능력과 수완이 요구되며, 국가 안보를 위한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류의존형’은 통치권자의 가치관이나 정권의 대립 구도, 정부에 종속되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은 일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권과는 별개인 일반국민들의 역할이 한일 관계개선에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SNS와 같은 뉴미디어들이 양국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45) “대일 외교,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미래한국』, 2016년 10월 13일.

46) “박정화-JP, 요청에서 日 외교관과 밤새...,” 『프레시안』, 2016년 8월 31일.

47) 이동준, 『불편한 회고: 외교 사료로 보는 한일관계 70년』(서울: 삼인, 2016b), p. 44.

48) 『동아일보』, 2015년 9월 2일.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한일 관계개선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일 간에 부정적인 여론들이 형성되고 일본 내에서 험한 감정이 높아지면서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잦아졌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 수도 한류 붐이 일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줄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양국 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적 이익 수반과 함께 양 국민들의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는 한일 국민들 간의 문화적 차이를 상쇄시키기도 하며, 상대국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본다. 또한 순수 민간단체의 상호 방문, 청년 학생 교류, 다양한 계층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는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도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한일 간 대화채널의 세대교체와 자국 내에서 중·노년층과 젊은 층의 교류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도 요구된다.⁴⁹⁾

다음으로 일본인 관계 전문가들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은 각각 유형 A는 ‘여론의존형,’ 유형 B는 ‘시대상황형,’ 그리고 유형 C는 ‘여건중시형’이었다.

‘여론의존형’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한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 그리고 시민단체, 학자나 국가 관계 전문가 등의 전문가집단의 주도적인 협력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이 국가 간 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정부가 외교상 또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다루기 힘든 현안에 대해서도 NGO와 같은 순수한 민간조직이 국가와 민족주의의 테두리를 넘어 양국 간에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갖는 이념지향성과 비공식성을 기반으로 양국 간의 연대와 협력⁵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좋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외교의 위기상황이나 타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공중들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가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세분화된 공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도 요구된다.⁵¹⁾ 그리고 서로의 인식차로 발생하는 갈등을 표면화

49) 세종연구소, “한·일 전략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2015년 12월 7일, pp. 1-6, http://www.sejong.org/board/bd_news/1/egoread.php?bd=9&seq=1167 (검색일: 2016년 10월 12일).

50) 정미애 (2011), p. 19.

시켜 불신감을 조성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가 상대국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하며,⁵²⁾ 한일 자매도시 간의 실무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 왕래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또한 국민들 스스로도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 간에도 역사 인식과 상대국에 대한 의식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교적 ‘배타적 감정’에서 자유로운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상호이해와 유대강화를 할 수 있는 민간외교의 장을 확대시킴으로써⁵³⁾ 일본과 한국 간의 갈등의 요소들을 녹이고 양국이 서로 좋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시대상황형’은 국민정서가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적 경험들을 통해 형성된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이나 통치권자의 가치관은 당시 상황 즉, 정권교체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한 간의 관계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고 결국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도 인식한다. 따라서 양국이 처한 입장이나 양국 정치의 특수한 상황들을 서로 헤아리면서 자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관계를 조절⁵⁴⁾할 수 있는 정치권의 외교적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과거사 문제들을 양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역사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⁵⁵⁾ 이외에도 언론이 양국 관계와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정서가 쉽게 변하거나 편협한 여론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51) S. Hwang and G. T. Cameron, “The Elephant in the Room is Awake and Takes Things Personally: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 The General Public’s Estimation of American Diplomacy,” *Public Relations Review*, Vol. 34 (2009), pp. 41-48; J. Wang, “Effectively Managing National Reputation: Strategic Public Diplomacy Revisite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Sheraton New York, New York City, May 25, 2009, http://www.allacademic.com/meta/p13418_index.html.

52) 『동아일보』, 2015년 9월 2일.

53) 『경향신문』, 2014년 10월 21일.

54) 『경향신문』, 2014년 10월 21일.

55) 정재정,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정책브리핑』 No.2016-14 (세종연구소, 2016b), pp. 1-13.

고 생각된다.

‘여건중시형’은 지정학적 또는 지리적이라는 환경적으로 자연스레 형성된 요인들이 불가피하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일한 간의 문화적 차이는 양국 국민들 간의 심리적 거리를 멀게 하고 서로 간에 이해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있어서도 간극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건중시형’은 역사 문제를 떠나 지정학적 이해와 보편적 인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동반자로서의 한일 관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⁵⁶⁾

또한 일본과 한국이 지정학적 조건이나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간의 경쟁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역할을 분담해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질서를 보완하고 일본과 한국이 열린 자세로 협력 방안과 모멘텀을 찾는 노력⁵⁷⁾을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양국 간의 갈등요소는 줄이고, 상생의 관계로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오랜 시간 국제 관계를 다뤘던 관계 전문가들이 각자의 경험들을 토대로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차이와 갈등요소들을 찾아내고 제3자적 시각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국가와 국민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기존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들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통치권자 역시도 대의를 위해 개인의 가치관을 내세우기 보다는 양국 간의 마찰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도 요구된다.

2. 합의

Q 방법론을 개발한 스티븐슨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양자 물리학과 계슈탈트 심리학 그리고 호이징어의 유희이론 등에 기초한다.⁵⁸⁾ 인간을 ‘놀이하는

56) 정재정 (2016b), pp. 10-11.

57) 세종연구소 (2015년 12월 7일), pp. 1-6.

58) 김홍규 (2008), pp. 27-77.

동물(Homo Ludens)'로 규정한 호이징아의 유희이론에 따르면 세상사는 크게 일과 유희로 구분된다. 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교환에 속하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반면에 놀이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가쁨으로 분류된다.⁵⁹⁾

외교관 같은 정치가나 무역을 하는 사업가가 아닌 여행과 상식으로서의 일반인이 갖는 이웃 나라에 관한 이해는 수고로운 정보(information)보다는 가벼운 소통(communication)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 나라에 관한 정서를 구성하는 문화는 호이징아가 주장하는 유희를 바탕으로 하는 신화나 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신화나 의식이 가장 강력하게 내재화하는 것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경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SNS 시대가 확산되면서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더욱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와의 접촉이나 노출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책에 휩싸이거나 여론에 동조하기 쉬워지기도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탈 중심적 활동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정책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혹은 각종 이익단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탈 대량적 매체(Demass Media) 혹은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에 의한 자발적 혹은 자생적 관계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경을 넘나드는 팟캐스트나 블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여행담이나 문화 소개 등의 확산을 자극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유형 가운데 민간 중심의 활동에 가능성을 두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들의 주관성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한·일 혹은 일·한 관계는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양국 간 인식의 골이 깊다. 특히 야스쿠니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위안부와 강제동원 보상 문제, 독도와 관련한 영유권 분쟁 등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문제들이 최근

59) 김홍규 (2008), pp. 33-35; J. Huizinga 저, 김윤수 옮김, 『호모 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 (서울: 까치, 1981), pp. 14-23.

들어 갈등과 대립이라는 악재로 더욱 작용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정치정세나 정치지도자의 개성, 또는 사회경제적인 상황 변화나 중국과 북한의 동향, 양국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국의 역할은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점점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⁶⁰⁾ 즉, 오랜 시간 동안 양국 사이에 깊은 골을 고착화시켜온 것은 아날로그에 의한 중심적·하향적·일방적 메시지(communication-pain)의 강요와 수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일본에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피해자 의식이 강한 반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자각은 희박하다. 한국의 경우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의 술수로서 ‘반일’ 감정을 부추이기도 하며, 역사적 피해자로서의 인식만을 강조하며 맹목적인 ‘반일’을 일관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⁶¹⁾

양국의 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한 인식차이에 기인하는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타협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퇴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결국 인식의 차이는 분명 양국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⁶²⁾ 따라서 그간에 한·일 혹은 일·한 관계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낸 인식의 골을 명확히 분석하고 양국 간에 인식의 차를 줄이는 것이 양국 관계개선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주변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 속 관계를 좀 더 우호적이고 상생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되리라 사료된다.

인류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탈 중심적, 쌍방향 네트워크에 의한 놀이 문화(communication-pleasure)로 그 발상을 전환하고 확산시켜 가기 위한 개개인의 경험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바야흐로 개방, 참여, 공유에 지배하는 웹 2.0 시대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각 유형의 특성들과 이를 토대로 한 양국 간의 상관관계 비교를 통해서 <표 11>과 같이 한일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60) 박진우 (2014), pp. 101-102, 124.

61) 박진우 (2014), pp. 125-126.

62) 김상준 (2014), pp. 107-132.

〈표 11〉 한국과 일본의 유형별 특성 및 방안

한국			
유형	지배논리형(제1유형)	환경수용형(제2유형)	교류의존형(제3유형)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힘, 역사 이해차등 지배적인 힘이나 논리가 양국의 주요 갈등요인. - 지정학적 조건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환경적 요인들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나 관계 변화 가능성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 - 언론이나 전문가집단의 협력과 노력으로 관계개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피해의식 등 역사 이해가 주요 갈등요인. - 정권교체에 따른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변화, 문화 차이, 지정학적 조건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등 환경에 따른 문제들이 갈등요인이며,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지도자와 보수 정권의 역할이 양국의 관계를 좌우하는 편이며, 언론도 정치적 입장에서 독립될 수 없다고 생각. - 관광 활성화를 통한 양국의 경제 성장 증대, 일반국민들의 자연스러운 교류 및 양국민간단체의 상호 방면에 따른 협력은 서로 간의 이해차이를 극복할 수 있음.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관계에서 직접적 힘을 행사하는 정치지도자나 집권당이 역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를 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상대국의 입장도 수용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또한 한일 관계 문제를 정권 협상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함. - 언론이 정부와 독립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역시 중립적인 입장으로 양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 역시도 언론에 부당한 힘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입장이 곧 국민의 입장이고 한일간의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는 편협한 국민정서나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일 관계에 관련된 학자나 기타 전문가들이 양국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슈들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와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요구됨. 또한 국민들에게 상대국 이해에 필요한 교육도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의 역사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양국이 서로 관여되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협의를 통해 양국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하며, 양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 - 한국과 일본 모두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각 국가가 빠져 있는 역사에 대한 오류들을 바로 잡아 서로의 인식차를 좁히고 역사를 재정비해야 함. - 지정학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들을 당연시 여기기보다는 이러한 약조들을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역발상이 필요하며, 주변국과의 관계도 양국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는 현명한 중간자 역할이 양국에게 필요함. - 정치지도자의 외교 능력과 수완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일, 혐한의 인식을 지우고, 한일 간의 이미지나 인식들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화적 교류, 자국 홍보가 필요하며,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인 관광객만을 우대하는 편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일본 관광객 또한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전략이 필요함. - 양국의 순수 민간(시민)단체, 국민 차원에서의 다양한 직접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간의 인식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함. - 한일 간 대화채널의 세대교체와 중노년층과 젊은층의 교류를 통해 정보 교환 및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추측해진 한류의 바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의 기회들도 만들고, 일본의 문화들도 한국에 소개함으로써 양국이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일본			
유형	여론의존형(유형 A)	시대상황형(유형 B)	여건중시형(유형 C)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것이 아니라 양국의 시민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상호 교류, 전문가집단의 협력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이 국가 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관광산업 활성화는 양국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만들어 내주고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에 따라, 또는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역사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요인이라고 생각. - 정권교체 때마다 통치권자와 집권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양국 간의 관계도 달라진다고 생각. - 상대국에 대한 개인적 경험들이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뀔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국가 간 태도, 국민정서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언론이 어떠한 논조로 양국의 문제들을 보도하느냐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도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언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양국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에게 주어진 환경적 요인들이 불가피하게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가 양국 사이에서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함. - 국제 관계 전문가들의 외교 관계 경험들이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중국이나 북한 등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도 달라지고,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의 시민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상호 교류를 통해 특정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민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논의되고 있는 여론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양국의 역사학자나 관계 전문가들이 각국의 입장에서 편협한 여론 선동을 하지 못하도록 중심적인 입장에서 바로잡아야 함. - 국가(지도자 및 정당), 국민, 역사학자 또는 관계 전문가들 간의 상호교류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모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이 상대국에 대한 일차적 정보원으로서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실적인 협한 또는 반일하고 양국의 언론인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인의 윤리적 자세와 중재자 역할 수행이 요구됨. -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교류와 교육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조건으로 생성된 문화 차이나 사고방식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 관계 전문가들이 근본적이 차이들을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양국 사이에서 마찰을 빚는 데 주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변국과 유연한 관계유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통치권자 개인의 가치관은 잠시 보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교류나 협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

【참고문헌】

- 곽진오. “독도와 한일관계: 일본의 독도인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46집 (한국 일본문화학회, 2010).
- 김상준. “한일관계의 안정과 지속: 정치지도자의 메시지 전달과 정향을 중심으로.” 『日本研究論叢』 제41호 (현대일본학회, 2015).
- 김성한. “동북아 세 가지 삼각관계의 역학구도: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 관계.” 『국제관계 연구』 제20권 제1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5).
- 김성해. “한국 신문의 중국과 일본 보도의 프레임과 담론분석: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996~2005.” 한국언론재단 편. 『미디어에 나타난 이웃: 한·중·일 언론의 상호국가보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6).
- 김영희. “한일관계에서 언론의 역할.” 『관훈저널』 통권 제135호 (관훈클럽, 2015 여름).
- 김일철·김승일. “언론인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주관성 연구』 통권 제18호 (한국 주관성연구학회, 2009).
- 김일철·유지희. “병원PR에 관한 실무자들의 인식 유형.” 『주관성 연구』 30권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15).
- 김호섭.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 역할.” 『일본연구논총』 제29호 (현대일본학회, 2009).
- 김홍규.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남상구.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제46집 (한일관계사학회, 2013).
- 민 희·김창남. “386세대의 정치적 태도 연구.” 『주관성 연구』 17권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08).
- 박선영. “한국병합 100년과 한일 언론: 병합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의 껍.” 『언론과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1).
- 박진우.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한일관계의 상호인식.” 『일본사상』 제27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4).
- 박진희. “한일관계, 역사를 알면 미래로 나갈 수 있을까? —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비평사, 2014); 조세영,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역사와 현실』 통권 제96호 (한국 역사연구회, 2015).
- 박형준. “한일 신문의 프레임과 주관적 표현 비교를 통한 갈등 조장 여부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4).
- 신경애. “한국 대학생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수업에 대한 니즈.” 『일본문화연구』 제55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5).

- 양기웅. “한일관계와 역사 갈등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연구』 제17집 2호 (영남국
제정치학회보, 2014).
- 이동준. “한일관계 보도 이대로 좋은가.” 『관훈저널』 통권 제138호 (관훈클럽, 2016a).
_____. 『불편한 회고: 외교사료로 보는 한일관계 70년』 (서울: 삼인, 2016b).
- 이성환.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과 한일관계.” 『일본문화연구』 제53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5).
- 이원덕. “한일관계와 역사마찰: 김영삼 정권의 대일 역사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
총』 제40호 (현대일본학회, 2014).
- 이창현. “한일관계와 뉴스 보도의 프레임, 그리고 상호인식.” 『인문사회과학연구』 Vol.
18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 임도경. “정치부 기자들의 정치인 인식 유형 연구.” 『주관성 연구』 17권 (한국주관성연구
학회, 2008).
- 정미애. “한일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뉴거버넌스.” 『아태연구』 제18권 제2호 (경희
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1).
- 정재정. “한일관계의 위기와 극복을 향한 오디세이: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
로.” 『영토해양연구』 Vol. 5 (동북아역사재단, 2013).
_____. “한일협력과 역사문제—갈등을 넘어 화해로.” 『일본연구논총』 제43호 (현대일본
학회, 2016a).
_____.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정책브리핑』 No.2016-14 (세종연구소, 2016b).
- 진창수.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 『JPI 정책포럼』 155권 (제주평화연구원,
2014).
- 한정호. “PR 실무자의 PR 업무 역할에 대한 인식의 유형분석연구.” 『한국언론학회』 46권
4호 (한국언론학회, 2002).
- KBS-NHK. “한일 공동 국민의식 조사” (KBS 방송문화연구소, 2010).

Brown, S.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0).

Cha, V. D.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
ang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Gilboa, E. “Secret Diplomacy in the Television Ag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Vol. 60, No. 3 (1998).

Huizinga, J. 저, 김윤수 옮김. 『호모 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 (서울: 까치,
1981).

Hwang, S., and Cameron, G. T. “The Elephant in the Room is Awake and Takes Things
Personally: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 The General Public’s Estimation

- of American Diplomacy.” *Public Relations Review*, Vol. 34 (2009).
- Kerlinger, F. N. “Q methodology in Behavioral Research.” In S. R. Brown & D. J. Brenner (eds.). *Science, Psychology, and Communi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72).
- Luhmann, N. 저. 윤재왕 옮김. 『체계이론 입문』 (서울: 새물결, 2014).
- Neff, W. S., and J. Cohen. “A Method for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Internal Consistency of Q-sort Arrays.” *Psychological Bulletin*, Vol. 68 (1967).
- Sommer, M. S. “Product Symbolism and the Perception of Social Strata.” In S. A. Greyser (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64).
- Stephenson, W.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 _____. “Applications of Communication Theory: I. The Substructure of Science.” *Psychology Record*, Vol. 23, No. 1 (1972).
- _____. “The Quantumization of Psychological Events.” *Operant Subjectivity*, Vol. 12, No. 1, 2 (1998-1989).
- Sundland, D. M. “The Construction of Q Sorts: A Criticism.” *Psychological Review*, Vol. 69 (1962).
- Thomas, D. B., and L. R. Bass. “Defining Obama: The Political Subjectivity of Presidential Identity and Authenticity in the Public Mind.”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Vol. 9, No. 1 (2011).
- Wang, J. “Effectively Managing National Reputation: Strategic Public Diplomacy Revisite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Sheraton New York, New York City, May 25, 2009.
- Wang, J., and T. Chang. “Strategic Public Diplomacy and Local Press: How A High-profile “Head-of-State” Visit was Covered in America’s Heartland.” *Public Relations Review*, Vol. 30, No. 1 (2004).
- Zhang, J., Q. Qui, and G. T. Cameron. “A Contingency Approach to the Sino-US Conflict Resolution.” *Public Relations Review*, Vol. 30, No. 4 (2004).
- Zhang, J., and W. L. Benoit. “Message Strategies of Saudi Arabia’s Image Restoration Campaign After 9/11.” *Public Relations Review*, Vol. 30 (2004).

〈인터넷 자료〉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4996&cid=40942&categoryId=31433> (검색일: 2016년 10월 12일).

세종연구소. “한·일 전략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2015년 12월 7일. http://www.sejong.org/board/bd_news/1/egoread.php?bd=9&seq=1167 (검색일: 2016년 10월 12일).

〈신문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미래한국』.

『조선일보』.

『프레시안』.

『한국일보』.

『허핑턴포스트코리아』.

[ABSTRACT]

How Relation Experts Understand the National Relationship

Q Study of the PR Practitioners' Percep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lchul Kim | Dong-eui University

Sejung Oh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ational conflict might not be unavoidable in-between the neighboring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and vice vers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or mitigate the uncomfortable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herent factors. Most of the prior studies done by specific subjects like history,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or culture. These studies are not easy to free from the stereotyped frame by its subject and related professionals. So this study focused just on the 'Relationship' itself by focusing on the PR experts. Q methodology adapted against the PR Agency practitioners who has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s both in Korea and Japan. Result found 3 different perception types each on both countries. In Korea, those are '(National) Management' Type, 'Environment(Acceptance)' Type, and 'Exchange(Improvement)' Type. In Japan, named 'Public Opinion(Reliance)' Type, 'Contemporary (Circumstance)' Type, and 'Requirement(Priority)' Type each. Every type on both sides has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further discussion and implication followed to provide background for further strategic implementation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amongst the two incumbent nations. To elaborate this study for

further actionable strategies development, more diversified experts group research need to be followed.

Keyword: Korea-Japan, Japan-Korea, Relationship Improvement, International PR, Q Method

투고일: 2016년 10월 25일, 심사일: 2016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23일